

중국의 식량수출 중단 구상

보고자 : 정정길 중국사무소장(08. 03. 12)

□ 중국 “곡물수출 중단” 언급

○ 발표자 및 일시

- 원지아바오(溫家寶) 국무원총리는 3월 5일 제11차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의 정부업무보고 시(신화사 08. 3. 5))
-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위원회 위원이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재정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과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겸직하고 있는 천시원(陳錫文)은 3월 5일 정치협상소그룹토론회에서(新京報 08. 3. 6)

○ 주요 내용

- 원지아바오 총리: 금년에 물가 급등 방지를 위해 9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, 그 가운데 두 번째 조치로 “공업용 식량사용과 식량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”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천시원 주임: 국내 식량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“원칙적으로 금년의 식량수출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것이다”라고 말하였다. “금년의 중점 정책은 물가 안정인데 식량가격이 이미 앞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상 모든 식량수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”고 부연 설명하였다.

□ 후속 조치

- 회의 상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그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후속 조치는 발표 된 것이 없음.

□ 향후 전망

- 국무원 총리와 중국공산당 중앙농촌공작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잇따라 발표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데,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

민정치협상회의(3.5~3.18)가 끝나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 됨.

- 어떠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향후 추이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.
- 중국 정부의 식량수출 중단 조치가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계측 및 대책 마련이 요구됨.